

시선

사설

바닥이 보이는 인내심  
끝내 ‘소송’ 가야하나

지난 7일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토대로 기숙사 수용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재학생 49만 5,060명 중 타 지역 출신 학생은 16만 2,797명인데 비해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5만 5,088명에 불과해 고작 33.8%를 수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부생’만 따져봤을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수용 비율이 14.9%다. 공공기숙사가 건설택도 24.1% 수준이다. 전국 평균에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학교 입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진행해도 부족할 공공기숙사 건축이 임대업자들의 이른바 ‘생존권’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 설상가상으로 허가권을 지닌 동대문구청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바닥난 구성원의 인내를 계속 시험하고 있다.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기숙사가 건설된다고 해도, 인근에서 거주하는 자취·하숙생들이 ‘기숙사’로 이동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완공된 행복기숙사 입사 학생 중 48.9%는 통학하던 학생이다. 자취나 하숙 학생은 29.1%다. 통계가 입증해준다. 나아가 기숙사 경쟁률은 매년 3.5:1 내외를 기록하고 매년 탈락하는 학생 수는 2,400여 명에 달한다. 잠재적인 수요자다.

통계를 살펴다 보면 현재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숙사가 지어져서 ‘공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실의 이유는 ‘임대주택의 과도한 가격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 밖에도 임대업자들은 원래 한 명이 사용하던 자취방에 두 명을 살게 해서, ‘반값’을 받겠다는 ‘착한 자취방’의 조삼모사 논리를 펼친다. 기가 막힐 일이다.

학교는 대화 속에서 나름의 안을 제안했다. ‘착한 자취방’의 규모와 수만 제대로 파악해 제시한다면, 기숙사 탈락 학생에게 학교가 직접 나서 소개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대업자들의 주장은 ‘500명 수용 후 2년에서 3년 동안’ 연착륙할 것에서, 되려 ‘아예 수용인원을 500명으로 줄일 것’으로 바뀌었다. 안하무인이다. 동대문구청은 이 상황에서 학교와 주민 간의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말한다. 말이 상생이지 대학 측의 양보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우리학교 구성원은 그동안 지역사회 현안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공공기숙사 문제에서도 ‘공청회’를 요구해오자,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마련했다.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인내하고 소통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일련의 상생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 없이, 다시 ‘조정’을 이야기한다면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회기동에 거주하는 학생 수만 2,076명인 우리학교는 이 지역의 주민이 아닌가? 3,280명의 공동민원은 100여 명에 불과한 주민들의 민원보다 무게가 가벼운 것인가?

최근 판결 결과를 감안할 때, 공공기숙사 건축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구성원은 지역사회와 쌓아온 관계를 위해, 거듭 대화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상생’의 책임을 대학에 떠미는 것은 무책임하다. 임대업자들은 앞서 제시한 객관적 자료를 반박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동대문구청은 조정의 중심에 있는 만큼, 공정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상생이다.

우리학교 등 4개 대학  
총학생회  
“언론사 대학평가 반대”

미디어 여론동향 | 2014. 9. 29~10. 12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경희의료원은 지난 2일 개원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경희의료원, 개원 43주년 기념식 개최/이데일리/2014.10.6) 기념식에는 유기홍 의무부총장과 임영진 의료원장 등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사와 축사, 각종 시상,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HI로고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기념사에서 “기념식을 통해 2010년에 선포한 비전인 ‘소통과 융합으로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는 대학병원’으로 발전할



이주의 주제 - 대학 평가 순위 상승의 이면

대학의 ‘종합순위 상승’ 이메일 씬쓸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경영학과 강의를 듣길 희망하는 국제캠퍼스 학생을 위한 화상강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학기 기자 역시 경영학에 관심이 있어, 회계원리 수업을 화상강의로 듣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수님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강의실이 아닌 서울캠퍼스에 있는 교수님과의 소통은 쉽지 않다. 무인카메라도 정확히 강의하는 부분을 촬영하지 못할 때가 있다. 칠판에 적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는 것이 허공인 상황에 당황할 때도 있다. 화상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입을 모아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교수님과 면대 면으로 듣는 수업에 비해 강의 내용을 명확히 전달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는 올해 초 ‘대학 행·재정발전계획안’을 통해 대형강의 증설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강의와 화상강의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온라인강의가 오프라인강의보다 집중도가 떨어진 다든지, 앞서 이야기한 화상강의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든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다. 이런 와중에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여건 부문의 ‘온라인 강의공개 강화 비율’ 순위가 1등인 사실은 씬쓸하다. 심지어 웹메일을 통해 우

리학교의 종합순위가 한 계단 올랐고, 교육역량이 증대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마주했을 때는 참담했다. 정량지표만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학교의 모습에는 학생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대학생들은 ‘대학평가거부선언’을 통해 평가를 주최하는 언론사와 기관들에게 걸로 드러나는 평가지표만 있을 뿐 속사정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순위 한 계단 상승을 홍보하는 대학에 오히려 조점이 옮겨질 필요성을 느낀다.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은 강좌수가 ‘몇 개’인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강좌 수가 몇 개인지에 달려있다. 평가를 통해 이를 반추하지 못한 채 외면한다면, 문제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전가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상당하다. ‘미래대학리포트’를 위한 질적 자료연구과정 중 80명의 FGI참가자를 선발하는데 무려 600여 명의 학생이 지원했다. 지난 여름방학 국제캠퍼스 총학생회가 진행한 ‘2014 민족자주경회 학자사안 인식조사’는 SNS를 통해 급하게 진행된 것임에도, 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일이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인 일이 될 때 교육여건 개선의 진정한 단초를 쌓을 수 있다. 대학본부가 주장하는 평가에서 거둔 교육역량 강화가, 최소한 강의의 교수도 제대로 비취주지도 못하는 화상강의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용소방대원 등 18개 기관 900여 명이 참석해 다중시설 화재발생 시 초기대피,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등을 연습했다.

올해 국내 최초로 석박사 과정으로 신설된 우리학교 소셜네트워크과학과가 지난 8일 공개세미나와 함께 2015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국내 최초 ‘소셜네트워크과학과’ 자리 잡아, 공개 세미나 열어/전자신문/2014.10.9) 소셜네트워크과학과는 사회과학, 네트워크과학, 인공지능, 의사결정과정, 빅데이터 분석 기법, 디자인 씬킹, 통계 모델링 등 여러 학제를 융합해 교육하고 연구하는 석박사 과정이다. 물리학과, 수학과, 지리학과, 경영학과 교수로 구성된 협동과정인 소셜네트워크과학과 교수진은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통해 복잡한 사회시스템 분석과 문제 해결 방법을 연구한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 대학원 입학설명회와 함께 열렸다. 내년 대학원 과정에는 네트워크과학 및 응용, 복잡계 이론 및 응용, 서비스 디자인, 비즈니스모델 연구, 지리정보시스템(GIS)·재난관리, 지리정보시스템분석(GIS·Analysis), 통계 모델링 방법론, SNS세미나, 소셜네트워크와 경제 수업을 열 예정이다.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  
‘의지’와 ‘목표’에 있다

세시봉

진척없는 정원 감축안  
권오은 <편집장>



#1. 올해 초부터 교육부가 개인 트레이너로 나서서 대학들에게 ‘강제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있다. 미래의 학령인구를 감안했을 때 지금 대학들의 체중(학생정원)이 과대하다는 게 이유다. 처음에는 먹을 것(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 등의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갖고 욕죄더니, 얼마 전 평가초안을 발표해 강제로 지방흡입수술(5단계 평가를 통한 ‘강제’ 정원감축)까지 꺼내들었다.

#2. 마지못해 우리학교는 체중을 “4% 감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잠잠하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 내년에 2.4%를 전체적으로 감량하고, 그 다음에 1.6%는 ‘군살’만 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2.4%를 몸 전체에서 ‘똑같이’ 감량해도, 신체불균형이 찾아올 것 같아 걱정이다. 더구나 무엇이 ‘군살’인지, 어떻게 뺄 것인지도 여전히 고민이다.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이어트 실패로 가는 전형이다.

교육부가 “4%만 빼면 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학교의 정상체중을 위한 것은 아니다

#3. 40Kg감량(이만큼 뺄 살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을 때 비결은, ‘원푸드 다이어트’나 ‘특별한 헬스 트레이닝’이 아니라 ‘빼야 한다는 의지’와 ‘언제까지 얼마를 뺄 지를 정하는 목표’였다. 그러니까 우리학교로 치면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정원감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또 갑자기 굶고 살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토대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학교의 학생규모는 전국 최대다. 학생 수가 대학재정에 도움이 되던 시절에 열심히 몸집을 키운 덕이다. 어느 순간부터 비대해진 규모는 몸에 무리로 작용했지만, 더 크고 나면 빠질 것살이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교육여건으로 보나, 행정구조로 보나 이제 살은 ‘반드시’ 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살을 얼마나’ 빼야 할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개인 트레이너로 나선 교육부가 “4%만 빼면 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학교의 정상체중을 위함인 아니라는 것은 학교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4. 그래서 이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난 학기부터 이야기했으나, 여전히 논의는 ‘머릿속’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러다가 강제 다이어트에 돌입하면 얇한 ‘취업률’이라는 운동으로 군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나 뼈(대학의 근본인 학문)를 상하게 할까’ 걱정이다. 그러니 풍부한 다이어트 경험자로서 당부하고 싶다. 우리학교의 적정 정원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앞으로 정원감축방법에 대해 구성원과 나눠달라. 참고로 살은 빼면 끝이 아니라, ‘요요’를 더 조심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 얻은 결과가 아니면, 부작용은 금세 찾아온다.

PS - 일개 학생은 학교를 걱정하는 마음에 인생 최대 비밀인 ‘40Kg 전설’도 풀어놓았다. 학교는 구성원과 다이어트 계획도 공유하지 못할 만큼 ‘비밀’이 많을까?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 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한)  
발행·편집인 조민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인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8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